

■ (언론 동향) 2021.11.16.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정부-생산업체 요소비료 공급 상황 '온도차'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전남·경남·제주 등 남부 지역 농가들이 요소비료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요소비료 공급 대책을 내놓는 등 '내년 2월까지 요소비료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현장을 안심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요소비료를 생산하는 무기질비료 업체들은 내년 1~2월부터 영농 현장에서 사용할 요소비료에 대해서는 공급에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농식품부 "2월까지 부족 없을 것"

올해 말까지 수요량 1만8000톤
완제품 확보 물량이 더 많아
1~2월 공급 가능량도 수요 상회
농협 계통구매, 원자재 가격 연동
계약단가도 분기별 조정 방침

요소수 품질 대란과 함께 마늘과 양파, 무 등 남부 지역 동계작물 재배 현장에서 요소비료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그동안 무기질비료에 대해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았던 농식품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요소비료 수요량 1만8000톤보다 이미 확보한 비료 완제품 물량이 많으며 불안해하는 농가를 안심시켰다. 또, 내년 1~2월 공급 가능 물량도 예상 수요량 대비 많으면서 내년 2월까지 공급 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 경남, 제주 등 남부지방에는 지역농협별로 비료생산업체와 계약한 올해 11~12월 요소비료 물량 2698톤 중 이미 공급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1810톤을 순차(15일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요소 등 무기질비료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 계통구매 계약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연동하도록 계약 방식을 변경하고, 계약단가도 연중 고정 방식에서 분기별 조정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중국 비중이 높은 요소 수입처를 중동 국가까지 다변화하기 위해 비료업체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비료 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적용 지속 등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료업계 "원료 확보부터 난항"

물류비 상승 등 수급불안에
11월 초 가격, 전년비 264%↑
"비료 1톤 팔면 2배 손해 봐"
한 달 반 전부터 원료 창고 '텅텅'
인산암모늄 수급도 심각 상황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11. 17.(수)

요소비료 원료인 요소 수급 문제는 급작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국제적인 비료 수요 증가와 무역 분쟁,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11월 4일 기준 요소 가격은 톤당 724달러로, 지난해 11~12월 평균 가격(274달러) 대비 264% 폭등했다. 요소 국제 공급량의 44%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자국 우선 공급 및 비축 등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금은 급등한 돈을 주고도 물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금액이 문제였지 10월초만 해도 요소 확보는 가능했으나 국내 계통 공급 가격으로는 원료를 수입하는데 부담이 컸다”며 “올해는 비료 1톤을 팔면 2배 손해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요소수 때문에 불거진 요소 수급에 대한 관심이 요소비료로 확대되면서 농식품부가 원자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꺼내들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내년 1~2월 공급할 요소비료 원료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비료업체 관계자는 “원래 11~12월은 이듬해 공급할 비료 생산을 위해 원료를 쌓아 둘 시기인데 한 달 반전 부터 창고가 비어 있다”며 수요량 대비 공급 가능 물량이 많다는 농식품부 발표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업체도 내년 사업을 위해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바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언급했다.

비료업체들은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들여오는 인산암모늄(DAP) 수급도 심각한 상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등한 가격도 문제지만 인산암모늄 역시 중국이 내수 공급량 확보를 위해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비료공급은 농사와 직결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업체들도 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수급 문제를 재현하지 않도록 비료 공급 정책을 다시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우정수 기자 >